호남고속도로 진출로서 불법경작…"불편·안전 우려"

도로사이 토지서 경작행위 횡행
교통사고 우려·악취 등 주민불편
관리주체 모호해 수십년간 방치
"원상복구 불이행시 강력 조치"

23일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진출로 인근에서 불법 농작물 경작 등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진출로(문화소통로) 인근에서 오랜 기간 대규모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 악취 등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곳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도로 확장공사 이전까지 불법경작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오전 찾은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진출로(문화소통로) 인근 토지에서는 배추, 옥수수, 쪽파 등 다양한 작물이 경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작지 곳곳에는 밭을 구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판자 등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엉성하게 만들어놓은 구조물도 눈에 띄었다.

경작지는 도로 가까이 확장됐으며, 경작을 위해 도로 사잇길로 이동하는 경작인의 모습도 목격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아 보였다. 또한 농작물이 도로변까지 자라나 일부 구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해 천천히 이동하던 한 고령의 경작인을 뒤늦게 목격한 차량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 서는 상황도 볼 수 있었다.

경작지는 문화소통로를 따라 1㎞ 가까이 이어졌고, 주변으로는 비료포대와 농업용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도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다. 이곳 일대에서는 퇴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도 진동했다.

곳곳에는 '불법 경작 금지'라는 내용이 담긴 한국도로공사의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불법 경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한 80대 경작인은 "최근까지도 지인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최근 땅이 광주시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여름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곳 일대의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지난 1973년~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도로공사의 땅이었고, 일부가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소유지, 개인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간 지속된 불법 경작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박모(25)씨는 "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 수십 년간 불법 경작이 계속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작지가 도로 가장자리와 맞닿아 있어 도로 사이로 이동하는 경작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가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작에서 비롯되는 폐기물이 동네의 미관을 해치고, 비료에서 나는 악취도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강력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불법 경작이 수십년간 방치됐던 이유는 소유주체가 다수고, 관리주체가 모호했던 탓으로 꼽힌다. 토지가 소유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획돼 있지 않는 탓에 경작자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불법으로 토지를 일궈온 것이다. 이곳 일대는 내년 중 실착공이 진행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될 예정이다.

공사를 관장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불법경작이 시작된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지자체와 연계해 오래전부터 활발한 원상복구 계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법경작의 특성상 수많은 경작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힘들어 원활한 단속에 차질이 있었고, 농작물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얽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도과정을 통해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실착공이 이뤄지기 전까지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해 놓은 상태"라며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도로 확장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2024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평두메 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등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2024년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올해의 환경 뉴스 후보를 추천받아 총 13개의 후보를 추려냈고, 시민들의 투표와 함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연생태 및 생물다양성 보호' 4개, '쓰레기 및 자원순환' 2개, '핵발전소 및 에너지 전환' 2개, '기후재난' 1개, '대기오염' 1개 등이다.

먼저 자연생태 및 생물다양성 보호 분야에서는 '평두메 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이 있다. 지난 5월 광주 북구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 습지는 광주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며 보전 가치를 인정받았다.

쓰레기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여전히 과다'가 꼽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광주시청 카페 일회용 컵 사용률 73%, 공공 축제 일회용컵 사용 97%에 달하는 등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발전소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대응'이 있다. 영광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설계 수명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 많은 쟁점이 발생했다.

기후재난 분야에서는 '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발표'가 선정됐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화순 동복천, 순천 와룡저수지, 강진 병영천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댐의 위치와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광주·전남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907기후정의행진 광주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2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907기후정의행진 광주지역 참가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기 오염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년 연속 불명예 1위 기록한 광양제철소'가 선정됐다.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2023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전국 943개 사업장 중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연간 배출량 전국 1, 2위를 나란히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올해 '평두메 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환경 이슈가 더 많았다"며 "2025년도에는 환경 부분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全南日報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광주 시민단체 "尹수사 거부 규탄 , 韓 탄핵 촉구"

광주비상행동·오월 단체 성명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오월 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 태도를 규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내란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게 될 특검의 임명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관철시켜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본색을 드러낸 한덕수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이다"며 "회의과정에서도 계엄에 대한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한 총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은 국민이 이룩한 승리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또 "시민사회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인정하는 어떤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수사 통지서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과 오월 영령을 모욕하는 처사다"며 "내란수괴 윤 대통령은 거짓말과 추태를 멈추고 즉각 수사에 응하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은 과거 음주로 인해 국정 운영을 방기하고 판단력을 잃어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의혹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소문은 국민에게 큰 의구심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내란 행위로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며 수사마저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은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다"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더 이상 국민과 역사를 기만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상아 기자

공금 유용·갑질로 해임된 별정우체국장…법원 "해임 정당"

재판부 "공금 임의 사용은 사실"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직장내 갑질을 한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김정숙·이상현 부장판사)는 화순군 소재 별정우체국장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자체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서 A씨가 일부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예금모집수당을 착취한 점 등이 적발되자 지난 3월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300여만원 상당을 전임 국장에게 보내거나 퇴직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건네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하게 해 740여만원을 착취하고 우체국 예산으로 화장지를 구입한 뒤 고객에게 되판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도 압박을 가했으며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우정청이 '업무상횡령죄를 수사해달라'고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일부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을, 일부 혐의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직원들에게 반환받은 수당을 찬조금이나 고객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징계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사유가 사실이더라도 해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성금에 대한 횡령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성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존재하고 개인의 실적으로 인정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받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와 인격 비하성 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